

문 1.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 2.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 ④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문 3.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국의 지방정부 형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능 수행과 권한행사를 둘러싸고 대립·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 ② 지방의회는 주민 이익의 조정과 주민대표성을 중시하고, 집행기관은 합법성, 효율성, 능률성을 추구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의안제출권을 가진다.
- ④ 지방의회는 예산을 편성·확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문 4. 지방선거의 선거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선거구제보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한다.
- ② 대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보다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더 기여한다.
- ③ 대선거구제보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치 신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 ④ 현재 우리나라 광역의원선거구 중 지역구의원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가 적용된다.

문 5. 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공공재의 경우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feet)”에 의해서 선호표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공서비스와 세금의 조합을 제공하는 자치단체에 위치하게 된다.
- ② 사람들은 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적절한 자치단체를 찾아 거기서 세금을 지불함으로써 만족시킨다.
- ③ 티부모형의 균형에서 각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받게 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움직인다고 해서 후생이 증가하지 않는다.
- ④ 개인들이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옮겨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지방공공재에 무임승차자가 양산된다.

문 6.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거 우리나라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지방분권추진 3대 원칙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 ② 1985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유럽지방자치헌장(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에 반영되었다.
- ③ 공공사무 처리의 우선적인 권한은 중앙정부보다는 기초지방정부에 있다는 주장과 부합한다.
- ④ 유럽연합체가 지니는 강력한 권력에 대해 각 국가가 견제할 수 있는 데 기여하는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 1. ①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2. ④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3. ④
· 예산의 편성 권한: 지방자치단체장, 예산의 심의·확정: 지방의회

정답 및 해설

- 4. ③
· 소선거구제보다 대선거구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치 신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음
- 5. ④
· 개인들이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옮겨 다닐 수 있으므로, 개인의 선호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할 수 있음
- 6. ①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3년 참여정부시기 구성)에서 제시한 지방분권추진 3대 원칙: 보충성의 원칙, 선분권 후보원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문 7.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우리나라의 중앙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권고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③ 자치사무에 대한 장의 명령과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는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 또는 행. 재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 8. 「지방자치법」상 서울특별시에서 소속 행정기관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것은?

- ① 보건진료기관 ② 자치경찰기관
- ③ 출장소 ④ 시험연구기관

문 9.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 중 단층제를 택하고 있는 유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미국의 시티-카운티 통합시(consolidated cities)
- ㄴ. 미국의 카운티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시(independent cities)
- ㄷ. 영국의 런던광역정부(Greater London Authority)
- ㄹ. 우리나라의 세종특별자치시

- ① ㄹ ② ㄱ, ㄷ
-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7. ③

· 지방자치법 제169조: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하여, 주무부장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8. 정답없음

· 현행 경찰법(2021. 7. 1. 시행)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회 행정기관으로 둠

9. ③

· 영국의 런던광역정부는 32개의 바리와 런던시를 기초정부를 두고 있으므로 중층제에 해당

문 10. 정부 간 관계 모형(IGR)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딜런(Dillon)의 법칙’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주정부가 부여한 자치권만을 행사한다.
- ② 로즈(Rhodes)는 정부 간 관계에서 권력과 의존의 개념을 중시하고 권력을 자원, 지배적 상호작용, 편견의 동원으로 바라보았다.
- ③ 라이트(Wright)는 정부 간 관계를 정부계층 간 제도적 관계로 바라보며, 라이트(Wright)의 모형들은 우리나라 체제를 잘 설명한다.
- ④ 라이트(Wright)의 중첩적 권위모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에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자치권과 재량권이 제한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문 11.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 ③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 ④ 지방의회의 의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문 12.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도세 중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득세가 있다.
- ② 시·군세에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다.
- ③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중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레저세가 있다.
- ④ 구세에는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있다.

정답 및 해설

10. ③

· 라이트의 모형은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지방정부들이 기능적·재정적 의존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중앙 집권체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는 체제로 변화

11. ②

· 지방자치법 제55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함

12. ④

지방세기본법 제8조

-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시·도세
- 보통세의 종류

구 분	도	시·군
특·광역시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구	등록면허세	재산세

문 13.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의 처리에 관한 분쟁과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간의 분쟁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간의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문 14. 스톤(Stone)의 도시레짐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시레짐의 형성은 도시 내에서 어떠한 정책이 추진되고 수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공공이익과 사적이익 사이의 암묵적인 이해에 대한 의식적인 협조의 결과이다.
- ② 레짐이란 지배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형성하는 공식적인 연합이다.
- ③ 정부의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자원과 권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공기관과 필요한 자원을 가진 민간부문 간의 연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④ 지역발전이라는 목표를 갖는 도시레짐은 지역 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연합들의 이익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균형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문 15. 신지방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지방분권은 신중앙집권이 민주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모두 실패하면서 등장하였다.
- ② 미국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신지방분권을 추진하였으며, 대표적으로 닉슨 정부와 레이건 정부의 정책이 있다.
- ③ 신지방분권도 신중앙집권과 동일하게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함께 추구한다.
- ④ 영국은 2000년에 런던특별시를 부활시키는 등 신지방분권을 실시하였다.

정답 및 해설

13. ③

· 지방자치법 제150조: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14. ②

· 레짐이란 지배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형성하는 비공식적인 연합

15. ①

· 신지방분권 시기로 분류되는 미국의 닉슨정부는 사업별 보조금을 목적별 보조금으로 통합하여 연방의 간섭과 통제를 줄이고자 하였고,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연방의 기능을 줄이고 주의 권한을 늘리고자 하였음.

문 16.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 ②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었다면 주민감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감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17.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재정위기관체 지정 시 고려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 ② 예산대비 채무비율
- ③ 지방세 징수율
- ④ 공기업 채무상환비율

문 18.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 ② 조례를 폐지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조례가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16. ②

·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및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 1년 미만일 때,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주민소환에서 제외됨

17. ④

· 재정위기관체 등의 지정 시 고려사항(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3)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7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6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18. ②

· 지방자치법 제28조: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

문 19. 우리나라 현행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한다.
- ②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피선거권의 하한연령은 25세이다.
- ③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최소 정수는 7인이다.
- ④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2년이 경과한 18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문 20. 지방재정의 운영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지균형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전가할 수 있다.
- ④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19. ④

·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 외국인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음

20. ③

· 지방재정법 제3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